

# 탄약고 이전 약속 '아직도 불발탄'



지난 1975년 광주시 서구 마북동과 벽진동 일대 36만6000㎡부지에 조성된 탄약고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마북동 주민들 215만여㎡ 42년동안 묶여 재산권 침해 피해 일주일이면 옮길 탄약만 남았는데...국방부 고집에 2년 넘게 표류 군공항 연계 댐 15년 이상 소요...“지역 발전 가로막는 주범 될 것”

광주 도심 속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마북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인근 주민의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올해까지 탄약고 이전 사업을 마무리(광주일보 2014년 1월 9일자 1면)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예산절감 등을 핑계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해 광주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드넓은 땅에 풀이 많아 목장이라고도 불리는 광주시 서구 마북동 탄약고는 1975년 서구 마북동과 벽진동 일대 36만6000㎡부지에 조성됐다. 국제규격 축구장(7140㎡) 51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탄약고 조성에 따라 인근 215만 5000㎡(탄약고 부지 미포함)에 달하는 토지도 지난 1976년부터 42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총 283만㎡부지 대부분은 논, 밭, 임야 등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군 탄약고 등 국·공유지는 전체 면적의 28.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마북동 탄약고를 공군부대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2344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들여 2014년 부대인근(문촌·신영·도호·신아촌마을) 토지 196만㎡를 매입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공사를 끝낸 뒤 탄약고를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2016년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같은해 8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결정을 통보받은 뒤 마북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국방부가 예산중복 등을 이유로 탄약고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제1전투비행단측에 마북동 탄약고내에서 면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세차례나 했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으며, 지난 7일 처음으로 면담에 나서게 됐다.

이날 방문한 마북동 탄약고는 노후된데다, 이전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탓에 건물 곳곳에 곰이 가고 녹이 슨 철골이 드러나 있었으며, 잡초 등이 덮인 수십개의 이글루형 탄약고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김육수 의원 등 서구의회의원들은 이날 “불과 일주일이면 옮길 수 있는 소량의 탄약만 남은 탄약고 때문에 시민들이 40년 넘게 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주장처럼 군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해 탄약고를 이전할 경우 군 공항 이전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돼 광주, 특히 서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탄

약고 부지는 국방부 소유 땅으로 제1전투비행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도 “이번 요구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한 뒤 비행단 입장이 아닌 서구 주민의 입장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과거 마북동 탄약고에는 공군탄약과 미군 소유의 항공탄약만이 이글루 모양의 탄약고에 보관돼 있었으나, 공군 탄약은 전부 비행단으로 옮겨져 미군 소유의 일부 항공 탄약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관된 미군 소유의 항공탄약은 일주일이면 다른 장소로 옮기 수 있는 소량이며, 뇌관과 탄약이 분리돼 폭발 위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북동 탄약고에는 제1전투비행단 소속 항공탄약관리병과 운전병, 여학병 등 40여명이 미군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미군 소유의 항공탄약이 최적의 환경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등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탄약고와 주변 제조업체 업무 '1순위'일 정도로 별다른 업무 없이 군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한국전쟁 때 억울하게 좌익 몰려 사살된 보성 피해자 유족

### 68년만에 국가배상...1억여원 지급 판결

학교 중 찼다 “빨치산 도주 도와” 누명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좌익으로 몰려 군중에 사살당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68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

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남 동부지역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35명 중 한 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보성의 한 국민(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양씨는 학교 소사(小使)를 부르려고 중을 찼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양씨가 중을 찼 것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양씨는 이후 석방됐으나 보성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다가 국군에 수복된 이후인 1950년 12월 다시 연행돼 산골짜기에서 사살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계속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함” 등을 이유로 사망한 양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각 800만원을 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광주에 분만실이 사라진다

저출산 여파 분만 가능 의료기관 5년새 절반 폐업

저출산 여파로 최근 5년 사이 광주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중 절반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및 분만건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4곳이었던 광주지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4년 21곳, 2015년 14곳, 2016년 13곳, 지난해 12곳으로 줄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분만건수는 2013년 1만7595건에서 2014년 1만7050건, 2015년 1만8027건, 2016년 1만6618건, 지난해 1만4580건으로 5년간 17.1%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분만가능 의료기관 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분만건수는 많이 줄었다. 2013년 14곳에서 2014년 16곳, 2015년 17곳 등 다소 늘었다가 2016년 15곳, 지난해 13곳으로 소폭 줄었다. 분만건수는 2013년 1만786건에서 지난해 8095건으로 24.9%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지만, 지난해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했다. 분만건수도 같은 기간 42만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줄었다. 최도자 의원은 “출산 의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선거법 위반' 이윤형 함평군수 징역 1년...당선 무효형

이윤형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문회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

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정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 '위안부 비하' 순천대 교수 징역 6월 선고 법정구속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을 해 파면됐던 순천대 교수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송모 교수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지난달 23일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이 상대로 하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많

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대학 사범대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얌이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끔찍한 여자들도 사살 다 끼가 있으니 까 따라다니던 거야”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

## 여자어린이에 음란영상 보여준 아파트 경비원 징역형



○7세 여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영상을 보여준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징역형. ○17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경비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7살 여자어린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로(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아파트경비원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재판부는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